

[종합]

“문화전당 문화·관광시설 강화해야”

‘문화수도 종합계획안 시민포럼’서 주장 교육·연구 치중보다 대형공연장 등 갖춰 관광객 몰려들게 ‘세계적 명물’로 지어야

교육·연구기능에 치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시민과 관광객이 상시 찾을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문화전당에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공연이나 전시회가 가능한 건물 자체만으로도 문화상품이 되는 세계적인 명물로 지어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랐다.

6일 광주전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 교류재단, 전남대문화예술특성화사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연구·교육기능도 중요하지만 문화전당은 ‘광주에 가면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 시민·관광객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 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형원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은 ‘문화면세점이 있는 문화터미널’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전당 건립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당 자체가 관광상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등 관광객과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세워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혜철 광주오페라단 단장도 “오

페라와 뮤지컬, 무용 등 문화수도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공연을 치를 수 있는 세계적 권위의 종합공연장 건립은 문화전당을 국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득업 전남대 교수는 지하건축 형태를 취한 문화전당 구조와 관련,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자연친화형 열린공간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지하구조는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지하 건축에 따른 고가의 공사비와 우수·습기·결로 방지 시설, 지하수변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시공이전부터 적절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호기자 chae@kwangju.co.kr



北 개성공장 제주산 마늘까기 북한인 근로자들이 6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운영 공장인 정성의학 종합센터-산과농 농수산 개성건강식품 분공장에서 제주산 마늘을 까고 있다. /연합뉴스

가구 소득양극화 사상 최악

작년 상·하위 20% 7.6배 격차 세부담도 月 8만7천원 14% ↑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등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1면>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1천원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82만9천원보다 무려 7.6배 많

았다. 특히 전국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7.64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는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매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의 균등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03년 이후 조금씩 높아져 지난해는 0.351까지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306만8천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도 2003년 29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44만3천원으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조세 지출은 8만7천원으로 지난 2005년 7만6천원보다 14% 증가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중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재산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질오염 총량관리 확대

영산강 등 4대강 외에 하천·연안까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적용돼 온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이들 4대강 외 하천과 연안 등 수계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 물환경관리를 기존 수질 중심에서 수생태계로 확대하고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제 실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호소별로 수질, 수생태계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됐다. 4대강 외에 수계에 대해 총량목표수질 및 기본방점을 정한 뒤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면 총량초과과과금을 징수하거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연합뉴스

관광 목적 해외지출 작년 10조원 넘었다

지난해 내국인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해외관광 경비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은 108억3천170만달러였으며 원화로 환산할 경우 10조3천451억원에 달했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일반여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면 총량초과과과금을 징수하거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연합뉴스

영화 ‘그놈 목소리’ 큰 반향 전남경찰, 아동실종사건 전면 재수사

아동 유괴 미제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가 최근 개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경찰이 장기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특별단속을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무량자 보호시설,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등 24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시설의 수용자를 면밀히 조사해 장기 실종신고가 된 아동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지난 1983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6명의 아동이 실종돼 아직껏 귀가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 1983년 목포시 산정동에서는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L(4)군이 실종됐으며, 지난 1997년에는 영암군 금정면 P(4)양이 사라져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13세 이하의 아동이 신고 48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벌인다. 아동을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등)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그놈 목소리’가 최근 인기를 끌자 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는 1991년 서울 입구정동에서 9살 난 아동 이형호 군이 유괴를 당했다가 한강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아직껏 잡히지 않았으며,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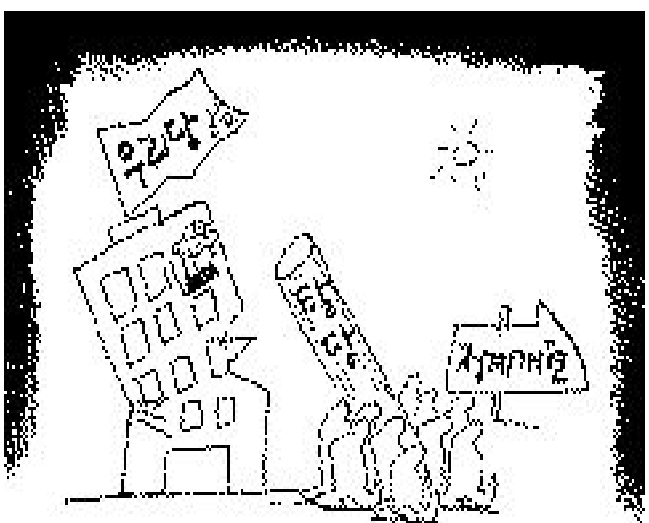
박지원·김우중씨 등 12일 사면 될듯

9일 국무회의서 대상 확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사면·복권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복권을 심의, 확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6일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내주초인 12일 단행된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문용 전 의원 등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규모면에서 정치인보다는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3년만에 기동뿌리 뽑힌 날

2007년도 광주·전남·전북·제주 '2007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공모' notice. The notice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for various projects, including: 1. Youth Employment Creation (Youth Employment Creation), 2.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3.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4.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5.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6.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7.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8.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9.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10.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